

■ 주요 업무 사례 ■

소수노조가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발령 및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대상판결 : 서울지방법노동위원회 2018. 9. 13.자 2018부노17 판정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A회사는 경영진 교체 후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하였고,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 징계를 하였습니다. A회사의 소수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을 이유로 비선호부서로 배치되는 불이익을 입었고, 전·현직 간부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회사를 대리하여, B노동조합이 문제 삼는 인사발령은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직 쇄신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뿐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징계도 해당자들 개인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법노동위원회는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B노동조합은 판정서 송달 전에 신청을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광선 변호사



권영환 변호사



장현진 변호사